

## 2011 지방수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1. 10. 8 시행)

### <출제평>

지방직 시험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출제였다. 7급다운 출제로서 전반적인 난이도도 높았고 많은 함정이 있었으며, 특히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다.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숙지해 두지 않은 수험생들에겐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직 시험에서는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숙지하여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김중규 -

1. 왈도(D.Waldo)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 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④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답] ③ D.Waldo는 신행정학을 창시한 학자로 고전적 행정원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통한 사회문제 처방을 중시하였다.

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답] ④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에 따르면 정치

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하여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지만 관료들은 정치가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익곡선과 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 다시말해 한계비용(MC)과 한계편익(MB)이 일치하는 지점이 파레토최적을 구현하는 최적의 생산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훨씬 큰 지점까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는 과잉공급되고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3.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 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답] ② 철의 삼각은 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는 호혜적 동맹관계이므로 행위자들간 관계가 경쟁·갈등 관계가 아니다.

4.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성과 제고
- ② 조직 운영의 민주화
- ③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 집단의 활성화

[답] ① 인간관계론은 비경제적 보상 등 관리방식이 고전적 조직이론과 달랐을 뿐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했다거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하지 못했으며 인간을 여전히 피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관계론도 만족한 장소가 유무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소사회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능률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관리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5.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

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다윈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④ 모두 맞는 지문이다.

6.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답] ②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지방세법). 2010.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2012 선행정학 p.915)

- ① 국가는 국가재정법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어 틀린 지문이다.
- ③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경우 국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에 도입되었으며 지방도 최근(2011.9.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틀린 지문이다.
- ④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은 이러한 법정상한선 없이 여전히 종래 국가처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틀리다.

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조직 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하려는 경우에 발생되기 쉬운 오류는?

- ① 환원주의(reductionism) 오류
- ② 표본추출(sampling) 오류
- ③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류
- ④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답] ② 개인의 속성의 합이 전체의 속성과 같다고 보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환원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개인의 속성을 합했을 때 전체의 속성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를 구성(합성)의 오류 내지는 환원의 오류라고 한다. 반대로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고 전체의 속성을 나누었을 때 개인의 속성과 같아진다고 보는 입장이 방법론적 전체주의 내지는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 접근법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지는 분할의 오류 내지는 생태론적 오류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8.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 ④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모두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안에 7인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③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9.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조

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② 사회적 기업이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을 하여야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①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무급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1 시행)

- (1) 의의
- 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②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되는 비영리기구(NGO)와는 구분된다.
- (2) 인증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자리 제공형 :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 서비스 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⑥ 일정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
- (3)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경영지원 :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② 교육훈련 지원 : 전문인력의 육성, 근로자의 능력향상

- 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③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 지원
- ④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함
-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지원 가능
- ⑥ 재정 지원 : 예산법위안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 지원

10. 조직의 이중 순환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 ② 학습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 ④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답] ① 이중적 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이란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서 부정적 환류 및 부정적 엔트로피를 통한 균형과 안정만을 중시하는 개방체제론과는 달리 자생이론 및 혼돈이론에서는 체제가 운영규범으로부터 이탈을 규제하고 수정하는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으로 새로운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범을 수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를 추구하기도 한다. 즉,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의 통합적 인식을 중시한다. ④의 경우는 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에만 집착하는 전통적인 단일고리적 학습을 말한다.

1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운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③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

분을 상실한다.

[답] ③ 우리나라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급 및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고위고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12.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 ②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 ③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 ④ 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답] ① Farmer도 반(反)관료제모형으로 후기산업사회의 행정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이지만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한 사람은 Farmer가 아니라?

- ② 후기산업사회는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의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진다.
- ④ 파머(D. Farmer)는 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징으로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을 들었는데 타자성(alterity)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식적 타인이란 나와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도덕적 타인이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주체로서의 타인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지적 특징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 구성주의	· 원자적·분권적 사회
· 상대주의	· 다양화
· 다원주의	· 상이성 존중의 사회질서
· 해방주의	· 반관료제적 규범
· 행동과 과정의 중시	· 다품종소량생산체제
	· 탈물질화
	· 반(反)규제주의
	· 환경의 부단한 변동
	· 높아지는 불확실성
	· 세계화

13.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답] ③ 하향적 집행이란 정책집행을 정책결과와 분리하여 결정된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치행정이원론의 시각에서 기계적인 집행(순응)을 이상적인 집행으로 본다. ③은 상향적 집행의 특징이다.

14. 우리나라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 ③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감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답]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공개의무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소유의 사람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직계존비속 가운데서 외척과 출가한 딸은 제외된다. ①의 경우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15.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 ② 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될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예산성과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2011.9이후), 국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 ② 총액제상예산제도는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③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는 인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납세자소송제도, 즉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16.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 ② 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답]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현행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이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특별시·광역시세이다.
- ② 2011.1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통폐합·간소화되었다.
- ④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 지방세목체계 (2011.1.1 개편이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7. 공무원 보수제도로써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답] ② 연봉제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이므로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연공서열이나 계급중심의 직업공무원제나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①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이므로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 팀정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 ③ 우리나라 연봉제는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이므로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직무급의 경우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등 상대적 비중을 따라 2등급(가, 나)으로 나뉘어진다.

1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②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답]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들만 적용가능하고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메타분석이란 평가종합의 일종으로 평가종합이 계량적·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연구들을 종합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면 메타분석은 그 중에서 계량적·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메타분석이란 연구결과와 발견된 통계자료나 사항들을 요약한 통계치들을 코딩하고 분석하는 기법인데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기



러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물고기의 마인드와 사고체계 자체가 바로 지식인 것이다.